2023. 4.

국회예산정책처 I 재정동향&이슈 I 제22호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Fiscal Trends & Issues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이슈 |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외 10건

해외재정동향 | 미 정부, 2024년도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일본 국회, 2023년도 예산 확정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NABO 재정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 02-6788-377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재정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3년 Vol. 1 통권 제22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 3

총수입·총지출 / 4
재정수지 / 5
국가채무 / 6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9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 10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18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 21
'청년도약계좌' 사업 운영방향 등 중간 발표 / 24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발표 / 27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 31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 35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 39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 / 44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 48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발표 / 52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 / 56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60

해외재정동향 / 65

미 정부, 2024년도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 66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70
일본 국회, 2023년도 예산 확정 / 7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총수입·총지출

2023년도 1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원 감소한 61.4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9%p 감소한 9.8%

- 총수입의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0.2조원, 2.7조원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이 6.8조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1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2조원 감소한 51.1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3%p 감소한 8.0%

- 총지출의 감소는 '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및 기금 지출이 각각 2.8조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2·2023 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2023(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1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1월 (당월)	1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	**609.1**	**-**	**65.3**	**10.7**	**625.7**	**61.4**	**61.4**	**9.8**	**△3.9**	**△0.9**
• 국세수입	396.6	-	49.7	12.5	400.5	42.9	42.9	10.7	△6.8	△1.8
• 세외수입	28.3	-	1.8	6.3	25.0	2.0	2.0	8.0	0.2	1.6
• 기금수입	184.1	-	13.8	7.5	200.3	16.5	16.5	8.2	2.7	0.7
(사회보장성기금)[1]	104.8	-	8.0	7.6	114.6	9.1	9.1	8.0	1.1	0.3
◆ 총지출	**679.5**	**-**	**56.3**	**8.3**	**638.7**	**51.1**	**51.1**	**8.0**	**△5.2**	**△0.3**
• 예산	449.8	-	39.0	8.7	441.1	36.6	36.6	8.3	△2.4	△0.4
- 일반회계	388.2	-	35.8	9.2	369.4	33.0	33.0	8.9	△2.8	△0.3
- 특별회계	61.6	-	3.2	5.2	71.6	3.6	3.6	5.0	0.4	△0.2
• 기금	229.7	-	17.3	7.5	197.7	14.5	14.5	7.3	△2.8	△0.2
(사회보장성기금)	64.4	-	5.6	8.7	69.5	6.1	6.1	8.8	0.5	0.1
• 세입세출외	-	-	-	-	-	-	-	-	-	-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3월호(2023. 3.)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2023년도 1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0.3조원 흑자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규모가 1.3조원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3조원 흑자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규모가 0.7조원 확대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원 하락하였으며, '23년 사업계획 수입 지연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하락(5.2조원)하여 통합재정수지 흑자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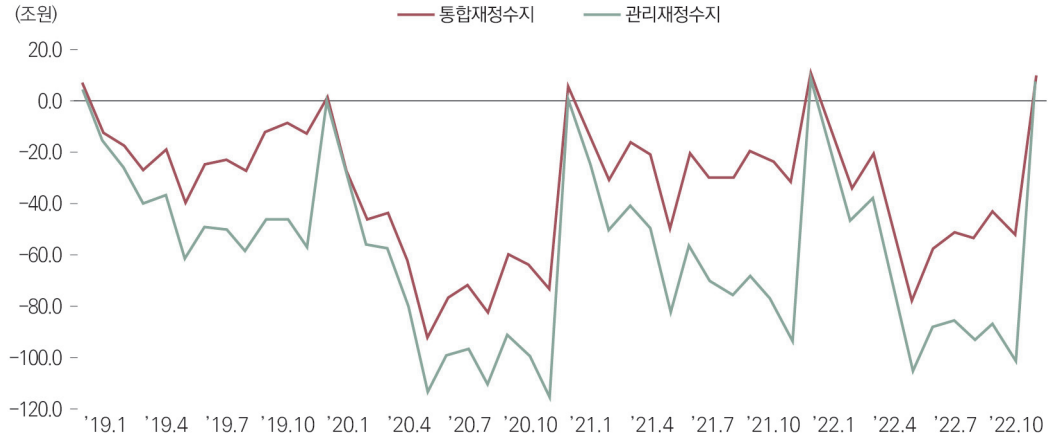
2022·2023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2023(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1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1월 (당월)	1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A)	609.1	-	65.3	10.7	625.7	61.4	61.4	9.8	△3.9	△0.9
◆ 총지출(B)	679.5	-	56.3	8.3	638.7	51.1	51.1	8.0	△5.2	△0.3
◆ 통합재정수지(C=A-B)	**△70.4**	**-**	**9.0**	**-**	**△13.1**	**10.3**	**10.3**	**-**	**1.3**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0.4	-	2.4	-	45.1	3.0	3.0	-	0.6	-
◆ 관리재정수지(E=C-D)	**△110.8**	**-**	**6.6**	**-**	**△58.2**	**7.3**	**7.3**	**-**	**0.7**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 3월호(2023. 3.)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3월호(2023. 3.)

국가채무

2022년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045.5조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939.1조원 대비 106.4조원 증가

-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1)]은 2021년 45.3%로, 2020년 42.2% 대비 3.1%p 상승

2000~2022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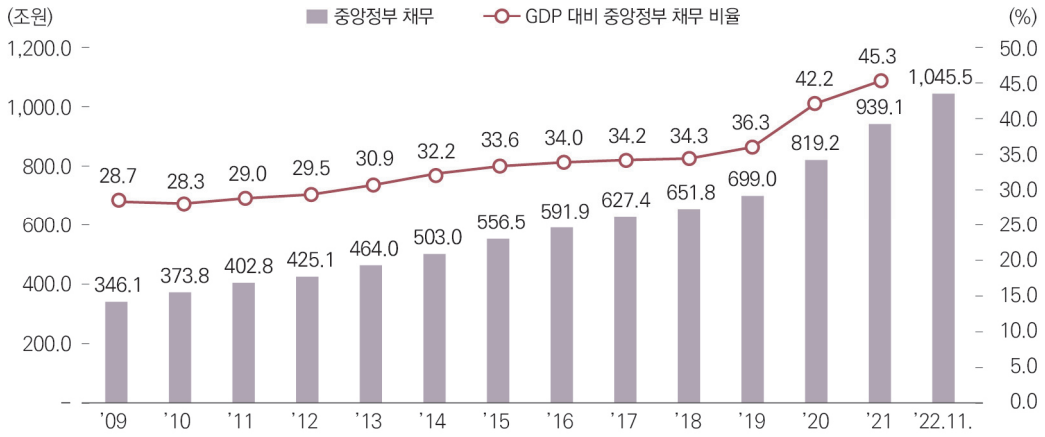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잠정)		
	결산	결산(A)	2차추경	11월(B)	전년 결산 대비(B-A)
◆ **중앙정부 채무**	**819.2**	**939.1**	**1,037.7**	**1,045.5**	**106.4**
• 국채[1)]	815.2	937.0	1,035.8	1,043.5	106.5
– 국고채권	726.8	843.7	937.5	948.9	105.2
– 국민주택채권	78.9	82.2	85.9	82.2	0.0
– 외평채권(외화)	9.5	11.2	12.3	12.3	1.1
• 차입금	3.3	2.0	1.9	1.9	△0.1
• 국고채무부담행위	0.7	0.1	0.1	0.1	0.0

주: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이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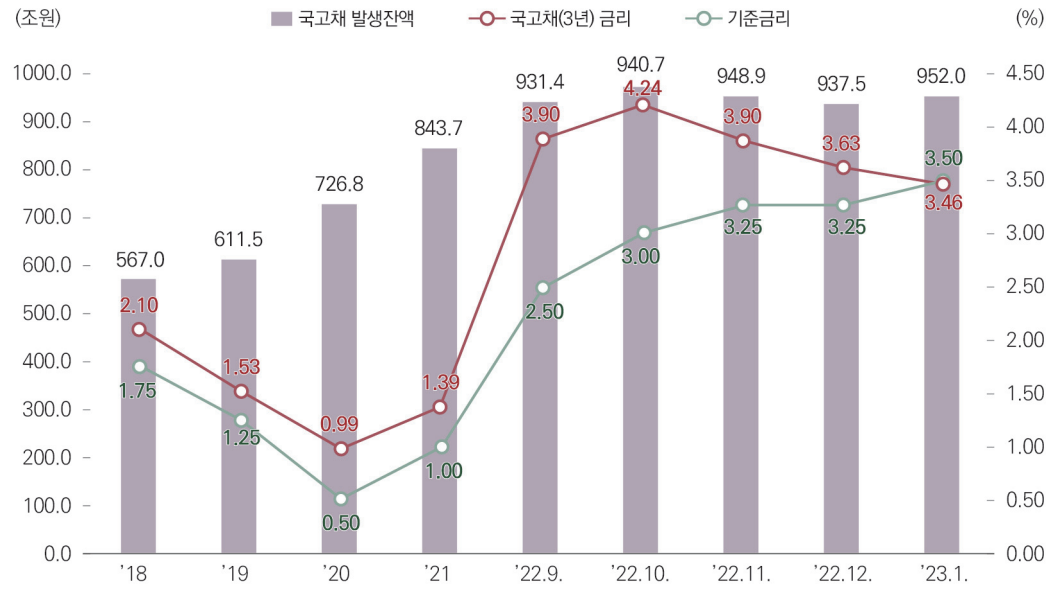
1) 2022년의 경우, GDP가 확정되지 않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

2023년도 1월말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 규모는 952.0조원으로, 2022년말 937.5조원 대비 14.5조원 증가

- 국고채 금리(3년 만기 기준)는 2020년 최하점(0.99%)을 기록한 후,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0월 기준 4.24%까지 상승하였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023년 1월 기준 3.46% 수준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
- 기준금리는 2020년 기준 0.50%로 최하점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3년 1월 기준 3.50%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3년) 금리 및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주: 1. 국고채 발행잔액은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총 상환액을 제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의미함
2. 국고채 금리 및 기준금리는 해당 기간 중 평균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회예산분석과 허아름 예산분석관(02-6788-3728)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 ‘청년도약계좌’ 사업 운영방향 등 중간 발표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발표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발표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2023년도 예산 개요

[재정총량]

- 총수입은 625.7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3.0% 증가
  -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400.5조원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 396.6조원 대비해서도 1.0% 증가한 수준
-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
  - 재정기조를 기존의 확장적 재정운용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에 비해 증가율을 낮춰 편성
- 통합재정수지는 △13.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는 △58.2조원 적자로 전망
  - 2023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6% 수준으로, 2022년 본예산(△54.1조원, GDP 대비 △2.5%)보다 1.9%p 개선
  - 2023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6% 수준으로, 2022년 본예산(△94.1조원, GDP 대비 △4.4%)보다 1.8%p 개선
- 국가채무는 1,134.4조원(GDP 대비 50.4%)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70.0조원 증가
  -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45.8조원) 등에 기인하며, 정부는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

2023년도 재정총량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총수입	553.6	609.1	625.7	72.1	13.0
총지출	607.7	679.5	638.7	31.0	5.1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41.0	-
(GDP대비, %)	(△2.5)	(△3.3)	(△0.6)	(1.9%p)	-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35.9	-
(GDP대비, %)	(△4.4)	(△5.1)	(△2.6)	(1.8%p)	-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4	70.0	-
(GDP대비, %)	(50.0)	(49.7)	(50.4)	(0.4%p)	-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분야별 재원배분]

- 2023년도 분야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분야가 226.0조원으로 가장 크고, 일반·지방행정 분야(112.2조원), 교육 분야(96.3조원), 국방 분야(57.0조원)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년 대비 증가규모는 일반·지방행정 분야(14.1조원), 교육 분야(12.1조원), 보건·복지·고용 분야(8.3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5.3조원), SOC 분야(△3.0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0.5조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함
  - 전년 대비 증가율은 교육 분야(14.4%), 일반·지방행정 분야(14.3%), 외교·통일 분야(7.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B)	증 감 (B-A)	
				%
총 지 출 (지방교부세·교부금 제외)	607.7 (477.5)	638.7 (487.7)	31.1 (10.1)	5.1 (2.1)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0	8.3	3.8
2. 교 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84.2 (19.1)	96.3 (20.5)	12.1 (1.4)	14.4 (7.4)
3. 문화·체육·관광	9.1	8.6	△0.5	△5.4
4. 환 경	11.9	12.2	0.3	2.6
5. R&D	29.8	31.1	1.3	4.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6.0	△5.3	△17.0
7. SOC	28.0	25.0	△3.0	△10.7
8. 농림·수산·식품	23.7	24.4	0.7	2.9
9. 국 방	54.6	57.0	2.4	4.4
10. 외교·통일	6.0	6.4	0.5	7.6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0.6	2.7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98.1 (33.0)	112.2 (36.9)	14.1 (3.8)	14.3 (11.6)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주요 분야별 사업 현황

[보건·복지·고용 분야]

- 재정지원 방향
  - 소득·고용·주거 안전망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장애인·노인·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 주요사업
  - **기초생활보장**(19조 1,355억원, 전년 대비 14.1% 증가)
    :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5.47%, 1인 가구 기준 6.84%) 에 따른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153.6만원 → 162만원), 주거급여 기준선 완화(기준중위소득 46% → 47%), 교육활동지원비 인상(평균 23.3%) 등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지급액 증가
  - **기초연금**(18조 5,304억원, 전년 대비 15.0% 증가)
    : 노인인구 증가(2022년 628만명 → 2023년 665만명) 및 월 최대 지급금 인상(30.8만원 → 32.3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12조 4,102억원, 전년 대비 4.1% 증가)
    :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 **부모급여**(1조 6,215억원, 전년 대비 334.6% 증가)
    :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지급수준 증가(2022년 월 30만원 → 2023년 월 35~70만원)
  - **구입·전세자금지원(융자)**(10조 3,800억원, 전년 대비 8.9% 증가)
    :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규모 증가 및 전세사기 피해가구 융자(약 0.2조원), 비정상거처 및 침수구역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무이자 융자(약 0.3조원) 반영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B)	증 감 (B-A)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167,638	191,355	23,717	14.1	• (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급여액 5.47% 인상 • (주거급여) 선전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46%→47%)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3.3% 인상
기초연금	161,140	185,304	24,164	15.0	• 대상 증가(628→665만명) 및 월 최대지급액 인상 (30.8만원→32.3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119,242	124,102	4,860	4.1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 8.7조원 → 9.2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1.8조원 → 1.8조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3,731	16,215	12,484	334.6	• 만 0~1세 아동에게 월 35~70만원 지급
구입·전세자금지원 (융자)	95,300	103,800	8,500	8.9	• 전세사기 피해 융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보증금 등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 분야]

- 재정지원 방향
  -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첨단분야 산업·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종합 지원,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기회 확대
- 주요사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65조 595억원, 전년 대비 16.4% 증가)
    :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내국세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교부규모 증가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3조 4,700억원, 전년 대비 9.4% 감소)
    : 안정적인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3년)
  - **대학혁신 지원**(1조 1,010억원, 전년대비 38.5% 증가)
    :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
    (평균 지원규모 - 대학 1교당 49억원 → 69억원, 전문대학 1교당 39억원 → 54억원)

교육 분야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B)	증 감 (B-A)		주요 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	757,607	107,012	16.4	• 내국세 호조에 따른 교부금 규모 증가 (교부율 : 내국세 총액의 20.79%)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8,290	34,700	△3,590	△9.4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3년)
대학혁신 지원	7,950	11,010	3,060	38.5	•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 규모 1.4배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 및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R&D 분야]

- 재정지원 방향
  -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 투자
- 주요사업
  - **핵심 전략기술 R&D 지원**(4조 5,487억원, 전년 대비 22.9% 증가)
    :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
  - **미개척 도전 분야 투자**(4,249억원, 전년 대비 24.5% 증가)
    : 중·장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기술 선점과 기술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 확보, 난치병 극복, 기초연구 지원 등 확대

R&D 분야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B)	증 감 (B-A)		주요 내용
				%	
핵심 전략기술 R&D 지원	37,003	45,487	8,484	22.9	• 반도체 6,069억원, 미래모빌리티 7,944억원, 우주 7,438억원, 첨단바이오 1조 273억원, 인공지능 9,340억원 등
미개척 도전 분야 투자	3,413	4,249	836	24.5	• 미래에너지 확보 747억원, 난치병 극복 569억원, 기초연구 지원 809억원 등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재정지원 방향
  - 핵심전략산업·제조업 집중투자, 공급망 및 수출여건 개선,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에너지신산업 창출 지원, 창업·벤처기업 지원방향을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재기지원

- 주요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R&D)**(9,376억원, 전년 대비 11.5% 증가)
    : 주력 및 신산업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 확보
  -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100억원, 신규)
    : 정부와 민간기업이 1:1 공동 투자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 수요에 대응한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반도체 인력 양성
  -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337억원, 신규)
    : 원전해체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지원
  - **창업사업화지원**(3,889억원, 전년 대비 439억원 감소)
    : 창업중심대학 지정·확대(6 → 9개소)를 통해 기존 공공 중심 사업물량 일부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674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B)	증 감 (B-A)		주요 내용
				%	
소재부품기술개발 (R&D)	8,410	9,376	966	11.5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 확보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	-	100	순증	-	• 주력사업인 반도체 산업의 현장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R&D)	-	337	순증	-	•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복원을 위한 해체기술 연구개발
창업사업화지원	4,328	3,889	△439	△10.1	•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 확대(6 → 9개소)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 분야]

- 재정지원 방향
  -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첨단전력 강화 및 방위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주요사업
  - **병 봉급**(2조 8,259억원, 전년 대비 22.6% 증가)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지급을 위해 병 봉급을 월 67.6만원 → 100만원(병장 기준)으로 인상
  - **병내일준비지원**(6,584억원, 전년 대비 200.6% 증가)
    :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는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비율을 확대(33%→71%)하여 사회진출지원금 인상(최대 월 14.1만원 → 30만원)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5조 2,954억원, 전년 대비 10.2% 증가)
    : 킬체인(F-X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대형기동헬기-Ⅱ, 특임여단 능력보강 등)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

국방 분야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B)	증 감 (B-A)		주요 내용
				%	
병 봉급	23,050	28,259	5,209	22.6	• 병 봉급 월 67.6만원 → 100만원(병장 기준)
병내일준비지원	2,190	6,584	4,394	200.6	• 정부의 내일준비적금 지원비율 상향 (33% → 71%, 월 14.1만원 → 30만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48,036	52,954	4,918	10.2	• F-X 2차(188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등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 및 국방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지방행정 분야]

- 재정지원 방향
  -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정책금융 역할 강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책임있는 과거사 지원 등
- 주요사업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조원, 전년 대비 33.3% 증가)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생활인프라(주거·통신 등)의 개선을 위해 특별양여금 증액
  - **청년도약계좌**(3,678억원, 신규)
    :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소득 연 6,000만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납입액의 3~6% 기여금을 매칭 지원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136억원, 전년 대비 126.1% 증가)
    :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본인 정보의 통제권 실현 서비스 제공 및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허브 확대 구축(금융 → 교육·복지·의료·통신)

일반·지방행정 분야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B)	증 감 (B-A)		주요 내용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7,500	10,000	2,500	33.3	•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
청년도약계좌	-	3,678	순증	-	•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여금 지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	60	136	76	126.1	• 정보 통제권 실현 서비스 제공 및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허브 확대 구축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 나라살림 예산개요」 및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분석총괄과 김윤성 예산분석관(02-6788-4625)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2023. 2. 20.)

-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 정부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발표한 「新 성장4.0 전략」(2022.12)의 첫 세부 대책으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 중 新 일상분야의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
- (개념) '스마트 물류'란 화물 운송·보관·분류 등 기존의 물류를 로봇·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첨단화·자동화·효율화하는 것으로, 물류비용은 절감하고 처리 속도와 효율성은 극대화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물류 서비스 제공 가능
- (추진 배경) AI·ICT 등 혁신 기술의 발달로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
  - 물류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며, 글로벌 물류기업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우위 선점을 위해 스마트 기술 투자 확대 및 사업화를 경쟁적으로 추진 중
    * 국내 물류시장 규모 : 89.5조원('17년) → 155조원('21년) / 종사자수 : 78만명
    * 세계 물류시장 규모 추정 : $8.7조('17년) → $11.4조('21년) → $16.4조('26년)
    * 구글·월마트·아마존(미국)은 드론 배송, 알리바바(중국)는 로봇 배송 서비스 제공
  - 국내 물류산업도 물류창고 자동·무인화 등이 진행 중이지만 첨단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바,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준, 물류시설 외곽화 및 과도한 입지규제 등이 주요 경쟁력 저하 원인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미국(100), EU(96), 일본(88), 중국(80.5), 한국(78.5)
    * 물류시설 외곽화에 따라 배송거리·시간 증가, 종사자 과로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이에 과감한 규제개선과 유망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新물류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여 물류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향상 도모
-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 전략으로 ①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②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③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강화를 제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주요 내용

- **(전략1)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 AI·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과 물류 서비스를 융복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변화로 연결

  - **(배송 로봇·드론 조기 상용화)** '26년 로봇 배송, '27년 드론 배송 상용화 등 무인배송 조기 상용화

    - 기술개발 지원 : 로봇 배송 실증, 스마트 무인택배함 기술 개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 등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
    - 사업화 지원 : 물류·플랫폼·IT 등을 아우르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 물류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민간주도 혁신 유도
    - 제도적 기반 조성 : 무인배송 법제화 및 안전기준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의 단계적 조성

무인 배송 서비스 상용화 로드맵

구 분	제도개선	'23	'24	'25	'26	'27
배송로봇	무인배송 법제화 (생활물류법)					
	영상촬영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실외이송로봇 규정 (지능형로봇법)					
	보도주행 허용 (도로교통법)					
	로봇 배송 단계적 실증					
	민간의 로봇배송 사업화 지원					
배송드론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보험제도 개편					
	드론 실증도시 사업 추진					
	중대형 이착륙장 기준 정비					

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 구현

    - 최종 배송지 인근 물류시설 확충 :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를 허용하고, 주민센터·전통시장·주차장·주유소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물류 인프라 확충

      * MFC(Micro Fulfillment Center) : 주문 수요를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가능한 시설

    - 물류시설 첨단화 지원 :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스마트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민간의 스마트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

  -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자율주행 화물차 상용화 및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 구축 등

    - 자율주행 화물차 기반 조성 : 시범운행지구 지정('23) 및 안전기준 마련('24) 등 상용화 지원

- 지하 물류배송체계 구축 : 기존 도시철도를 활용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27) 및 하이퍼튜브, 물류 전용 지하터널 등에 관한 기술개발 추진
-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 Cold Chain : 농수산품, 의약품, 배터리 등 온도변화에 민감한 화물을 일정한 온도 범위로 수송·보관하는 체계

● **(전략2)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물류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세계 10위권 물류 강국으로 도약('18년 25위 → '30년 10위권 진입)

-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① 도심 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② 신도시 개발 시 생활 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③ 도심 인근지역 유휴부지(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활용 및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① 인천공항·신공항 내 첨단 물류인프라 및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 구축 등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조성, ② 비수도권 국가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③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 도입 등
- **(물류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물류정보를 표준화 하고, 국내외 물동량,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통합한 육해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

● **(전략3)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강화** : 첨단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화물차와 물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실시간 위치정보를 활용한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7)
-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심 내 도로변에 화물·택배차의 안전한 하역업무 수행을 위한 물류 전용 조업공간을 조성

추진 시 고려사항

●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7)」 등 유사한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는 계획 이행 및 성과관리 필요

●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사전 협의 등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등 관련 예산이 지자체 매칭사업비 확보, 관계 기관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사전계획 미흡으로 집행이 부진한 바 있음

● 스마트 인프라 조기 구축뿐만 아니라 법제도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안전기준 마련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이 선행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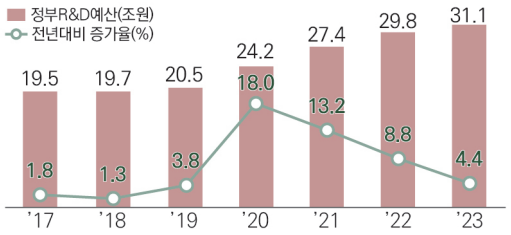
예산분석총괄과 이지선 예산분석관(02-6788-4687)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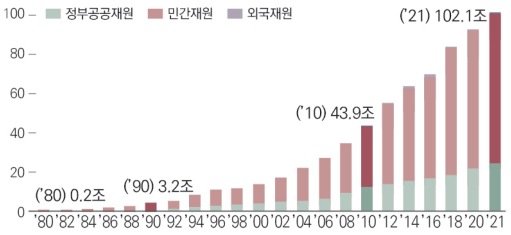
수립 배경 및 경과

-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1조원으로 확대되었고,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는 2021년 102.1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

[정부R&D 규모(조원) 및 전년比 증가율(%)]



[연도별 총 R&D 규모(조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성, 전략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0년 관련 내용을 담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짐[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발표(2023. 3.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상정하였고, 심의·의결된 중장기 투자전략을 3월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식 발표함
  -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최고기술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현재 80%)로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를 위해 ①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②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③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④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의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2020.9.6. 공표)

비전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책목표	투자목표	기술목표
주요 국정과제 충실한 이행 및 성과창출	정부총지출 5%, 5년간 170조원 투자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 80% → 85% 향상

4대 전략	23대 과제	2023년 예산
①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 (전략기술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4.68조원
	•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2.35조원
②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 (디지털 혁신) 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2.46조원
	• (기업역량 강화)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1.57조원
	• (공급망 대응)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	2.61조원
	• (국민건강 증진)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	1.87조원
	• (첨단국방)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지능형 국방 실현	3.32조원
③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 (기초연구)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 지원	3.05조원[1]
	• (인력양성)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	0.57조원[1]
	• (국제협력) 규모·범위 확대, 지속가능발전 강화	0.45조원[1]
	• (지역혁신) 지역 청년·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0.96조원[1]
	•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환경문제 대응	2.25조원[1]
④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민관협업 촉진) 기업지원 방식 혁신, 기업수요 반영 및 민관합동 프로젝트 확대, 국가기술전략센터 육성	-
	• (기술사업화 촉진) 범부처 기술사업화 R&D 체계화 및 다부처 협업 강화, 민군 협업 촉진	-
	• (투자 효율화)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 운영, 비예타사업 내실화 및 예타사업 우선 투자,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및 지출 재구조화	-

주: 1) 각 분야 전용사업 예산 규모로, 실제 해당 분야 지원예산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주요 내용

● **(전략1)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 (전략기술 육성) 2022년 3.74조원 규모인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예산을 2027년 6.03조원 규모로 매년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 12대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전략2)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 (디지털 혁신 및 기업역량 강화) 인공지능, 5G/6G,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공급망 대응)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
  - (국민건강증진 및 첨단국방) 바이오 제조혁신 및 실증기반을 확충하고, 노화·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국방 실현
- **(전략3)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별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과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지원
  -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과 우주·심해·극지 등을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청년과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자체 혁신역량 강화
  -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안전을 체계적으로 예측·관리하고, 사회적 현안 대응역량 제고
- **(전략4)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민관협업 촉진) 정부 R&D 기획 및 과제 수행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분야별 범부처 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출연(연) 중심 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
  - (기술사업화 촉진) 범부처 기술사업화 R&D를 체계화하고, 다부처·민군 협업 촉진
  - (투자 효율화) 부처 칸막이를 넘어 임무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예산 배분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상향[2] 추진에 따라 비예타사업들의 내실있는 기획을 도모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체계화 및 지출 재구조화 추진

중장기 투자전략 이행계획 및 고려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정부R&D 투자방향을 수립하였고(3.9.), 6월말까지 2024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
  - 또한, 2024년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2024년 중장기 투자전략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정·보완할 예정
  -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수립된 만큼, R&D 투자의 예측가능성과 전략성, 효과성 등을 높이고자 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마련될 2024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 등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둘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선 예산분석관(02-6788-4628)

2) 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등 중간 발표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2023. 3. 8.)

-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관하여 중간발표
  -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소요재원 예산 편성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이 완료되었고, 차질없는 상품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
  -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재원 3,440억원 등 총 3,678억원 편성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3.2.28.)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공고(2023.3.10.~3.31.), 2023.6월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의 주요내용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서, 본인 납입금과 경과이자 외에,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
  -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

    ※ 가구원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 납입금액은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개요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개인소득 기준(총급여[1] 기준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2]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적금방식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5년
적용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예정,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추후 공시)

주: 1)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2023.3.8.)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지원되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하여 설정(3.0%~6.0%). 다만, 개인소득 기준 6,000~7,500만원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
  - 특별중도해지 사유(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면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연계방안 마련
  - 청년지원 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2],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3]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중도해지 포함)
  - 예적금담보부대출 등 계좌유지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등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청년도약계좌'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중장기형 적금상품으로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좌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민성철 예산분석관(02-6788-4629)

1) 보건복지부 소관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의무 가입기간 3년
2) 고용노동부 소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의무 가입기간 2년
3) 금융위원회 소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목적 등이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하며, 만기 2년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강화 이행 전략 발표

추진배경

-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 제품인 시스템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으로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상황
  - 경제 여건 악화로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고 인공지능·전기차 등 미래 시장 성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수출·투자 지원 필요

    ※ 글로벌 반도체 시장 5,957억 달러(2022): 메모리 반도체 1,440억 달러(24%), 시스템 반도체 3,605억 달러(61%)

-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밸류체인 분야별 전문화 및 역량 강화가 필요
  -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은 IP-설계-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후공정 등으로 구성되며, 밸류체인 분야별 반도체 기업은 IP(Intellectual Property)기업, 팹리스기업, 디자인하우스기업, 후공정기업, 파운드리기업, 종합반도체기업 등으로 구분

    ※ IP기업은 설계를 전문하는 기업으로 특정 설계 블록을 팹리스나 종합반도체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을 실현,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 설계 후 외주를 통해 생산된 칩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각 파운드리 생산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후공정 기업은 웨이퍼에 있는 칩들을 기판이나 전자기기 등에 장착하기 위한 패키징, 팹 공정과 패키징 공정을 마친 반도체의 품질과 신뢰성 검사 등을 수행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반도체 설계, 후공정 분야 등의 역량 제고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2023.3.15.)」의 후속 조치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 (2023.3.16.)」을 발표

- 정부는 국가의 성장엔진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 분야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첨단 산업별 육성 전략이 포함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2023.3.15.)」을 발표
  - 6대 핵심과제는 ① 초격차 기술력확보, ② 혁신인재 양성, ③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④ 튼튼한 생태계 구축, ⑤ 투자특국, ⑥ 통상역량강화로 구성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6대 핵심과제

6대 핵심과제	주요 추진방향
초격차 기술력 확보	•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1] 구축,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공간 마련 •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 투입 계획
혁신인재 양성	• 이공계 우수인재 선발 해외연수 지원, 해외 인재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의 신규 지정 및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	•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국내 구축 등
투자특국(投資特國)	•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규제·인허가 제도 개선
통상역량강화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우호국들과 협력채널 구축, 통상 규제에 따른 산업 부담 최소화

주 1)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은 벨기에 소재 비영리 국제연구기관인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3.15.)를 바탕으로 작성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2023.3.15.)」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도약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6대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

첨단산업	비전	세부과제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신규 국가산단 포함) ‣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민간 투자 24조원 유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 투자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大 유망분야 실증
이차전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	‣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 20조원 투자(~2030년) ‣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 ‣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미래차	미래차 글로벌 3强 도약	‣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등
로봇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2조원 투자 ‣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3.15.)를 바탕으로 작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의 주요 내용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에서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②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③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④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등 5개 지원전략을 중심으로 제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강화 이행전략」의 주요 내용

주요 지원전략	주요 내용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 2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기 구축(경기도 용인시) ‣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인근에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기관 등이 집적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 팹리스 육성을 위한 공정 개방 확대 및 첨단공정 IP 공동 개발 ‣ 유망 팹리스 성장 촉진을 통해 매출 1조 원 기업 10개 육성 목표(2035년) ‣ 대규모 민간 투자, 연구개발을 통해 후공정 분야 첨단패키징 선도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미래기술 선점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촉진 ‣ 수요 대기업과 팹리스 간 구매 조건부 공동 프로젝트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반도체 기업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팹리스 펀드 조기 집중 투자 및 신규 조성('24.上) ‣ 다각적 인력양성 정책 통해 15만 명 인력양성 목표 추진 ‣ 연구·교육·실증 인프라 '한국형 IMEC' 비수도권 구축 ‣ 선도형 기술개발 확대 및 소부장-파운드리 양산 테스트 지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	‣ 우리 강점 제조공정과 미국 강점 소부장·설계 간 협력 ‣ 주요시장 대상 수요연계 기술협력 및 협력거점 구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3.16.)를 바탕으로 작성

● 지원전략 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30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제조공장 5기 구축 및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팹리스 기업, 연구소 등 최대 150개 기업과 기관 유치

-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와 인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판교의 팹리스 밸리 간 연계를 통해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부장이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

● 지원전략 ②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등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 확대, 디자인하우스·IP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한 설계 플랫폼 및 첨단 IP 개발

  ※ 2023년 상반기에 AI·전력·센서 등 유망분야 스타팹리스 20개 선정 후 기업 주도형 연구개발 지원, 팹리스 기업의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 지원 강화 등

-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팹리스 기업 10개 육성, 비수도권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패키징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 구축,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후공정·패키징 기술 등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

  ※ 후공정 선도에 필요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약 3,600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계획

- 지원전략 ③: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 기술개발 지원
  - 전력·차량·AI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3대 유망 반도체 기술 분야에 약 3.2조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

    ※ 전력반도체 분야 기술개발 사업(2024~2030년, 총사업비 4,420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2025~2031년, 총사업비 6,653억원)에 대해 202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계획 등
  - 수요 대기업과 팹리스 간 구매 조건부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자동차·가전·전력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대기업·공기업과 팹리스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구매 조건부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대규모 수요연계 프로젝트 신규 지원(2023년 지원건 당 50~80억원 지원)
- 지원전략 ④: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첨단산업 분야 제조시설 신·증설시 세제지원 확대(8~16% →15%~25% 공제), 평인·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2023년 1,000억원)
  - 팹리스 펀드의 조기 집중 투자 및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펀드 조성 계획
  - 다각적 인력양성 정책 통해 반도체 분야 15만 명 인력양성 목표 추진

    ※ 민관협력 반도체아카데미를 통한 현장형 인재 양성, 정부·산업계 공동 연구개발(2023~2032년, 2,228억원)을 통한 석박사급 인력 2,400명 양성, 대학 정원·교원 규정 개정을 통한 우수인력 집중 양성
- 지원전략 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 및 수출지원
  - 우리나라의 제조공정과 미국의 소부장·설계 분야 간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 미국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팹리스 연계 수요 발굴 및 반도체 상용화 지원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전략 이행 시 고려사항

-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추어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재정 사업을 관리할 필요
  -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반도체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윤성식 예산분석관(02-6788-4666)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발표(2023. 1. 19.)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1]에 따라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 2020년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2021~2022년 민·관합동 분과회의 및 자문회의, 예술인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획 발표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예술인의 종합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개 추진전략 및 13개 추진과제

4개 추진전략	13개 추진과제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
	•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 예술인 창작공간 다변화 지원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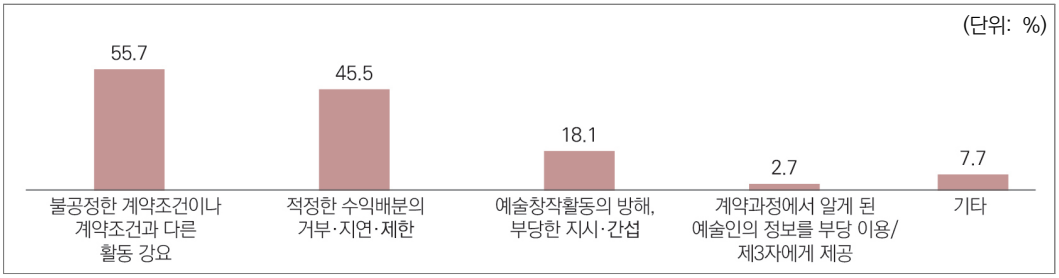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배경

- 문화예술 등 정책환경 변화
  - 5G 네트워크 기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산업 등 문화·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권리 보호 제도 마련과 새로운 개념의 예술인 정의 필요
  - 전통적 장르 간 경계가 붕괴되고 다양한 장르에 동시 종사하는 등 생산 방식의 다변화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유연한 개념 필요
-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수요
  - 예술인의 44.9%는 겸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겸업의 주요 사유는 낮고 불규칙한 소득이 가장 큰 비중(겸업 예술인의 76.3%)을 차지

    * 예술활동 연간 수입은 연평균 695만원으로, 최저임금제 기준 2,187만원의 31.7% 수준
  - 예술인의 지난 1년간 서면계약체결 경험률은 48.7%로, 이 중 표준계약서 사용은 66.0%, 부당한 계약 경험은 11.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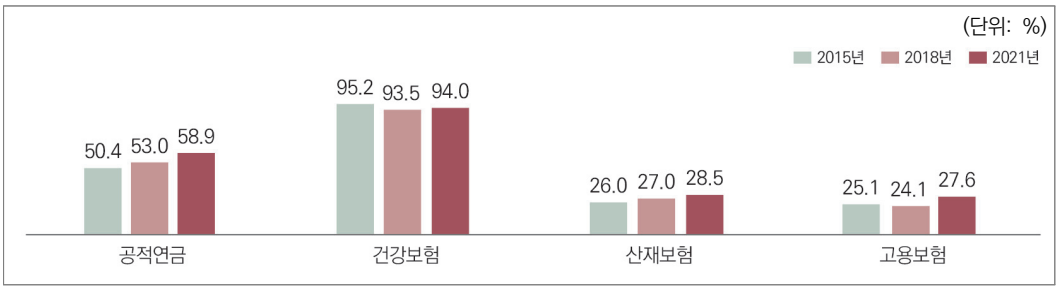
예술인의 부당한 계약 내용



  -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근로자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 제도 안내 및 가입 확대 노력 필요

    * 예술인 가입률: 고용보험 27.6%, 산재보험 28.5%, 국민연금 등 58.9%, 건강보험 94.0%
    * 근로자 가입률: 고용보험 90.5%, 산재보험 97.8%, 국민연금 등 91.7%, 건강보험 91.5%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2021. 12.
* 「예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작성,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20년 기준 자료를 2021년에 조사·발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주요 내용

- (전략1)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예술인 법적 정의 개선)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정의 규정(제2조제2호[2])을 개정하여 예술활동을 확인하지 않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활동 확인 예술인은 일반적 권리 보호에 더하여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확화
  - (효율적이고 공정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예술활동의 상시 등록 및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예술활동 증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예술인 본인의 경력을 관리, 예술활동증명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3중 논의 구조(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운영
  - (예술인 통계 강화 및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종합, 권리보호, 성희롱·성폭력으로 다양화하고, 방송·콘텐츠 산업 등 산업 분야 종사자 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안 마련
- (전략2)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의 고용보험 수혜 확대를 위해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예술인 산재보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며, 저소득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
  - (예술인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상해가 많은 무용 예술인 중심으로 상해 재활·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활동 시간이 비정기적인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 돌봄 제공 확산
  - (복지와 창작활동의 연결고리,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최초수혜 가점 상향 등을 통해 중복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창작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수혜자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예술인 창작공간 다변화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공간 및 예술활동에 적합한 특화 공간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국내·외 다양한 창작 공간 지원을 확대
- (전략3)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환경 조성
  -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 및 신고사건의 피해구제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신고-조사-심의·의결-구제조치' 등을 관리하는 통합형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

2) 「예술인 복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계약서 작성, 미작성에 대한 피해구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분야별 창작 대가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등 고위험 안전 취약 문화시설 중심 시설 개보수, 소규모 시설 안전진단 등 종합적인 안전을 지원

● (전략4) 예술인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

-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예비·신진 예술인에 대해 현장·행정역량 강화, 창작 준비 및 발표를 지원하고, 직업 예술인에 대해 전문인력 채용 지원, 일자리 매칭 등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지원) 기업에 대한 예술적 개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험적 성과를 도출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 도모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후원 활성화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기업의 예술단체 결연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

기본계획 추진 시 고려사항

● 예술인의 복지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 필요

- 예술인의 가입비율이 저조하여 효율적 안내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고,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정책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필요
- 불공정한 서면계약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점검·개선하고, 예술활동 관련 인권 보호 및 차별 행위 구제 등 인권보장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예술활동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 강화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이선화 예산분석관(02-6788-4635)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2023. 1. 30.)

- 정부는 '23.1.30.(월)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 등 포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이면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인구는 '20년 정점으로 하여 '21년 최초로 감소 전환하였으며,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357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인구(만명): ('00) 4,701 → ('20) 5,184 → ('21) 5,184 → ('22) 5,163 → ('30) 5,120 → ('40) 5,019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인구의 평균 연령 상승으로 생산성 저하 우려

※ 고령인구비중(65세 이상): ('18) 14.3%(고령사회) → ('25) 20.6%(초고령사회) → ('30) 25.5%

-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상기 위기 상황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과 함께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을 목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분야	As-is	To-be
국정 운영	사후적·방어적 노동시장 충격대응	산업·인구구조 전환 미래 대응체계 구축
목표	총 고용률 관리	대상별 고용률 집중 관리
정책 수단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지원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주도·직접일자리	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자료: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p.6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5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제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대 분야 16개 세부과제

연번	분야	세부과제
1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1) 고용둔화 선제적 대응 2) 고용위기 조기포착 시스템 구축
2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3) 직능 수준별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4) 업종·지역별 빈일자리 구인난 특별관리 5)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3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6) 청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7) 여성: 일·육아병행 및 경력단절 사전 예방 8) 고령자: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기반 구축 9)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직접지원 확대
4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10) 근로빈곤층→근로자 도약 지원 11) 일자리로의 Activation 강화 12)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
5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13) 일자리 사업의 균형 회복 14)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15)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 16) 노동시장 법·제도 개혁 및 일하는 문화 혁신

자료: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p.7에서 재작성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 (고용둔화 선제대응)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일자리 과제발굴·대응 등을 위해 기재부·고용부 공동주관의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
  - (고용위기 조기포착시스템 구축) 지역의 노동시장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직능수준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노동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

    ※ 외국인력 활용 방안 : 장기근속특례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용(최대 10년+a), 방문취업동포 고용허용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적용 및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 (업종·지역·기업별 빈일자리 특별관리)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
-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온라인스마트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매칭 서비스 및 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인 잡케어(Job care)를 고도화하고, 한번의 접속으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고용센터 신설('24.)

●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법정청년연령 대상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반기 개정안 마련 예정)
- (여성)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연령 상향(8세→12세)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를 확대(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

  ※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예방 등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제7차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3~'27) 수립 예정

- (고령자 및 장애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장애인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명단공표대상 확대,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 등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 (근로빈곤층 도약 지원)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통합네트워크」를 '23년 4개소 구축
- (실업급여 관련 개선)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고용보험법 개정)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수급자의 재취업을 밀착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하여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4대 사회보험 사무를 간소화할 계획

●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일자리 사업의 균형회복)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23년 14개 사업, 4.8만명 대상)
- (신산업분야 일자리창출 지원)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7만명, 반도체 인재 2.4만명을 양성

  ※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에 따라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 수립 예정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확충)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등 기존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23년 상반기까지 마련
- (법·제도·문화 혁신)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이와 연계한 장기휴가, 단체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

기본계획 추진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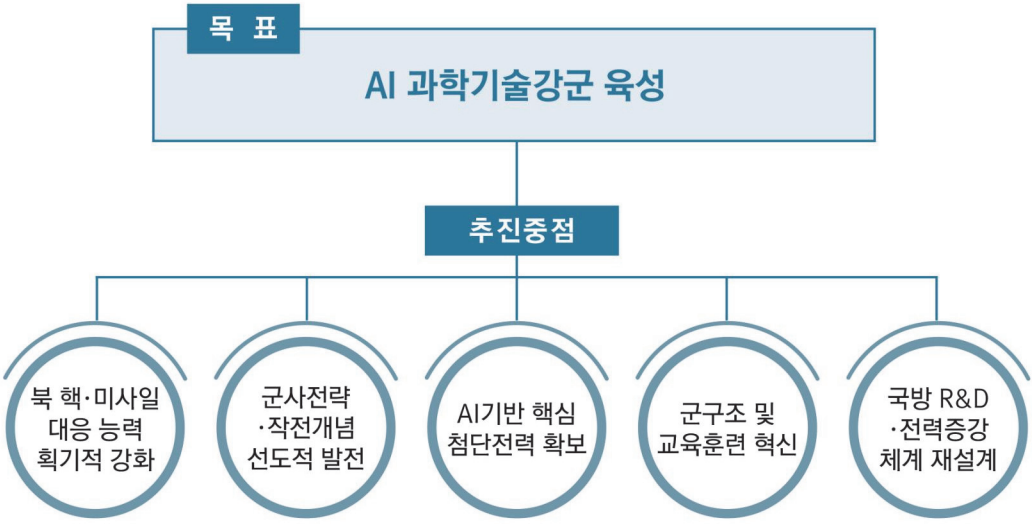
- 향후 기본계획상 추진과제에 맞추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이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
  -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등 연계가 필요한 다른 기본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김민석 예산분석관(02-6788-4638)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2023. 3. 3.)

-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1)]에 따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
  - 정부는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22. 7. 1.)
  -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장·차관 주관 기본계획수립 회의(4차례) 및 세미나·포럼(6차례)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2023년 2월 합동참모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회의,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



자료: 국방부, 「국방혁신 4.0 브로슈어」

---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역대 국방개혁 추진 현황

-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20 기본계획」 부터 2023년 3월 발표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까지 총 6번의 기본계획이 작성됨
  -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기획관리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2005년에 최초로 국방개혁 2020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기반이 마련
  - 이러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의 기준
  - 이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이 동 계획으로 대체됨

    ※ 동 계획은 2급 비밀문서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임

- 역대 국방개혁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라는 기본인식 하에 추진되어 왔으며,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됨
  -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미래전장환경의 변화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통합작전 수행 및 AI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전력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
  -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의 문제는 상비병력의 감축과 연계된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군 구조개편을 요구함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역대 국방개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6-2020) (국방개혁 2020)	발표 시기	2005. 12.
	추진 기간	2006 ~ 2008
	개혁 중점	•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전력체계 구축 •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발표 시기	2009. 6.
	수정사유	안보환경 평가결과, 북한 군사위협 불변 및 북한체제 불안전성 고조
	추진 기간	2009 ~ 2011
	개혁 중점	• 새로운 연합방위 체제하 전구작전 수행체제 구축 • 편성의 완전성을 구비하여 즉응성 향상 및 정예화 • 합동성을 강화하여 전투능력 및 효율성 제고 •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및 비대칭 위협 대처능력 확충

구분		주요 내용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발표 시기	2012. 8.
	수정사유	안보환경 평가결과, 북한 군사위협 지속 및 국가재정 여건 고려 개혁기간 연장
	추진 기간	2012 ~ 2013
	개혁 중점	• 적극적 대북 억제전략 구현 • 전작권 전환대비 합동·연합작전 지휘 및 수행 역량 강화 • 전투형 부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접적부대 병력구조 개선 • 적 위협과 작전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부대구조로 개선 •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 우선 확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발표 시기	2014. 3
	수정사유	안보환경 평가결과, 북한 군사위협 지속 및 성격 변화(비대칭 전력 증강)
	추진 기간	2014 ~ 2018
	개혁 중점	• 합동·연합작전 지휘 및 수행역량 강화 •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개편 • 네트워크 기반 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첨단전력 증강
국방개혁 2.0	발표 시기	2019.
	수정사유	• 새로운 정부(문재인) 출범 • 북한과의 갈등 완화(9.19. 군사합의 등) 포함 안보정세의 변화
	추진 기간	미명시(병력감축 2022년 한)
	개혁 중점	• 병력집약적 군구조를 첨단과학기술 위주 구조로 개편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 • 국가차원의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 4.0	발표 시기	2023.
	수정사유	• 새로운 정부(윤석열) 출범 • 북한과의 갈등 심화(미사일 발사 등), 미·중 관계 악화, 제 2차 인구절벽 등 안보환경 변화
	추진 기간	2023 ~ 2040
	개혁 중점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AI 기반 첨단전력 확보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대해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R&D·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의

-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5대 중점 16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하는 작전수행체계 강화와 감시정찰능력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확실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의 발전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 등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의 발전을 추진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미래 병역자원 감소 대비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 등에 맞추어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고, 예비전력을 상비전력 수준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발전
  -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무기체계의 획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를 통합하여 적기에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형 DIU(국방혁신단)을 신설하는 등 국방 R&D 체계 혁신

국방혁신 4.0 구성체계

5대 중점	16대 과제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① 한국형 3축체계 운영태세 강화
	②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획기적 강화
	③ 전략사령부 창설 및 발전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④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
	⑤ 과학기술기반의 작전개념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⑦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⑧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 (JADC2) 체계 구축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⑨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발전
	⑩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대
	⑪ 예비전력 능력 확충
	⑫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⑬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⑭ 혁신·개방·융합의 국방R&D체계 구축
	⑮ 국방 AI 기반 구축
	⑯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자료: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2023.3.3.)

추진 시 고려사항

-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군 구조개편을 추진하였으나, 8군단 해체가 지연되는 등 개혁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개혁이 수정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에 지연과 차질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근거한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음
-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는 AI 기반 핵심첨단 전력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나, 기존 국방개혁 2.0에서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 전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추진과제를 우선 내실화한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예산분석과 이한성 예산분석관(02-6788-4642)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2023. 2. 9.)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유·무상 분야별 시행계획을 조정·심사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함
  - 2023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22.6.30.) 이후 정부가 편성·제출하였으며, 국회가 의결('22.12.24.)한 예산을 반영하여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확정 추진함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수립 경과

절차	구분	시기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검토 요청	주관기관 → 각 부처	2022.1
시행기관 대상 수립지침 안내	주관기관	2022.2
기관별 시행계획 주관기관에 제출	시행기관	2022.3
분야별 시행계획(안) 제출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2022.5~6
유상·무상 사업 종합 심사·조정	국무조정실	2022.6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6.30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각 부처	2022.9.2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2022.12.24
2023년 무상분야 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마련	-	2023.1.10
2023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심의	실무위원회	2023.1.18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3.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 2023년 ODA 사업 예산 규모는 4조 7,77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88억원(21.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양자간원조는 3조 6,739억원(유상원조 1조 5,030억원, 무상원조 2조 1,709억원), 다자간원조는 1조 1,032억원임

유형별 ODA 사업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A)	2023(B)	증감	
				B-A	(B-A)/A
총ODA (a+b)	37,543	39,383	47,771	8,388	21.3
- 양자간 ODA (a)	29,261	31,157	36,739	5,582	17.9
무상원조	12,582	12,305	15,030	2,725	22.1
유상원조	16,679	18,852	21,709	2,857	15.2
- 다자간 ODA (b)	8,282	8,226	11,032	2,806	34.1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3.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도 ODA 사업의 부처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 7,910억원(42.4%)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외교부 1조 7,619억원(41.7%), 농림축산식품부 1,101억원(2.6%), 교육부 1,073억원(2.5%), 산업통상자원부 706억원(1.7%) 등의 순임

부처별 ODA 사업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A)	2023(B)	증감	
				B-A	(B-A)/A
총 ODA	33,611.2	36,550.9	42,289.3	5,738.4	15.7
기획재정부 (EDCF 포함)[1]	15,934.1	16,089.5	17,910.2	1,820.7	11.3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2]	12,323.9	14,460.7	17,619.1	3,158.4	21.8
농림축산식품부	1,005.8	1,052.7	1,100.6	47.9	4.6
교육부 (교육청 포함)[3]	782.7	949.1	1,073.0	123.9	13.1
산업통상자원부	521.2	698.8	706.4	7.6	1.1
보건복지부	677.4	619.7	663.3	43.6	7.0
국무조정실	98.5	100.7	111.4	10.7	10.6
지방자치단체	76.4	61.7	60.9	△0.8	△1.3
기타	2,191.2	2,518.0	3,044.4	526.4	20.9

주: 1) '23년도 ODA 예산, 기획재정부(본부)는 2,880.5억원, EDCF는 15,030억원
2) '23년도 ODA 예산, 외교부(본부)는 7,001.5억원, 한국국제협력단은 10,617.6억원
3) '23년도 ODA 예산 기준, 교육부는 1,049.5억원, 교육청은 23.5억원
1. 사업예산 규모는 ODA 계상비율에 따라서 ODA로 인정되는 액수만 포함
2. '23년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1,150억원, 양허성기금 중 4,332억원은 ODA 총규모에는 포함되나, 기관별 사업예산에는 미포함 (단, ADB, GCF에 대한 양허성기금은 사업예산에 포함)
3. '21년 42개(지자체 10개 포함), '22년 44개(지자체 11개 포함), '23년 45개(지자체 12개 포함) 기관이 참여하였음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3년 기준 45개 시행기관이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KOICA 외에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ODA 사업을 수행함
  - ’19년 대비 시행기관의 수와 ODA 규모가 각각 49.2%, 31.1% 확대되면서 사업 중복성 및 효과성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외교전략 및 수원국에 대한 재원배분 간 정합성, 수원국의 재정집행 환경을 고려한 예산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SDGs[1)]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2023년 ODA 시행기관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개)

시행부처(기관)	사업수	사업명
합계(45개)	1,840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포함)	32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 등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	825	국제기구분담금 및 인도적 지원, 국별협력사업, 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 등
농림축산식품부	54	국제농업협력사업 등
교육부	99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교육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매칭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72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 등
보건복지부	46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성생식모자보건서비스 질 제고사업 등
국무조정실	1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12개)	29	개도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기타	372	지능형 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농촌진흥청, 다자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국제백신연구소 분담금, 국제형사협력지원 등

주: 총 45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참여하였음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3.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며 인도주의적·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 시 고려사항

- OECD DAC에서 발표한 국가별 ODA 추진실적[2]에 따르면, 2021년 ODA 규모는 28.7억불로 DAC 회원국(29개) 중 1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ODA/GNI[3] 비율은 0.16%로 전년(0.14%) 대비 0.02%p 증가하였으나, DAC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임
  - ODA 규모 증가율 추이: ('18) 7.1% → ('19) 4.4% → ('20) 8.7% → ('21) 27.7%

    ※ ODA 규모 순위: 미국(1위), 독일(2위), 호주(13위), 덴마크(14위), 대한민국(15위)
  - ODA/GNI 추이: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ODA/GNI 현황: 독일 0.76%, 영국 0.5%, 일본 0.34%, 미국 0.2%

- 우리나라는 '23년도 예산안 편성시 코로나19 등에 따라 ODA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1.3% 확대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종식 추세에 따른 ODA 전략적 추진 및 효과성 제고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 다자협력 규모 증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양자협력 사업 재개, 전년도 ODA 사업 위축에 따른 기조효과 등에 따른 ODA 지원 규모 증가

    ※ '23년 ODA 확정액 규모는 4조 7,771억원으로 '22년 3조 9,383억원 대비 8,388억원이 증가(21.3%)
  - 그동안 보건, 그린 및 디지털 ODA에 많은 투자가 있어 왔으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농업 및 교육 ODA 등 분야의 활성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연계한 식량·농업 기술 지원 등 수원국 맞춤형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음

행정예산분석과 송은혜 예산분석관(02-6788-4640)

2) ODA 실적은 OECD DAC에서 집계·발표하며, 23.4월말 기준으로 2021년 수치(점정치)까지 공개하고 있음
3) ODA/GNI 비율 = 총ODA / 명목국민총소득(GNI) x 100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2022년도(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음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초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평가한 것으로, 인구·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3개 분야의 13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였음
  -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을 평가
  - 재정효율성: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관점에서 세입 및 세출관리의 효율을 평가
  - 재정계획성: 세수추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능력을 평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체계

분야	세부지표(13개)
건전성 (4개)	▪ (수지관리)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 (채무관리) ② 관리채무비율, ③ 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④ 공기업부채비율
효율성 (6개)	▪ (세입관리) 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⑥ 지방세징수율, ⑦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 (세출관리) ⑧ 지방보조금비율, 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⑩ 자체경비비율
계획성 (3개)	▪ (재정계획) ⑪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⑫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⑬ 이·불용액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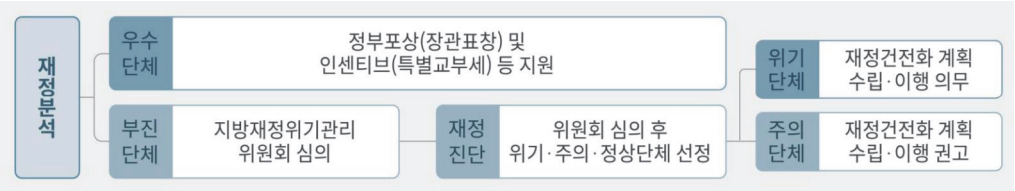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지방재정분석제도

(개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한 후, 분야별·지표별 분석결과 및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재정관리 수단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 /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5조의4

(결과활용)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 대상 추가적 재정진단 실시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분야

- 재정건전성 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채무잔액과 관리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 세입증가에 따라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도 전년대비 개선(△2.22%p, △1.19%p)
  - 채무잔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한 38.8조원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만 증가한 7.06%에 그침

2022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재정건전성 분야)

분야/지표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지표성격[1]
재정 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2]	5.03	3.55	1.90	-2.23	1.94	상향(↑)
	관리채무비율[3]	8.06	7.35	6.27	6.28	7.06	하향(↓)
	통합유동부채비율[4]	23.01	23.26	22.66	26.27	24.05	하향(↓)
	공기업부채비율[5]	41.58	37.26	34.44	34.94	33.75	하향(↓)

주: 1)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2) 통합재정수지비율(%) = [(수입-지출+순융자) / (지출+순융자)] × 100
3)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지급잔액포함) / 세입결산액] × 100
4) 통합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만기 1년미만) / 유동자산(1년내 회수가능)] × 100
5)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효율성 분야

- 재정효율성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관리 및 징수관리 측면에서 자체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이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입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23%p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개선
- 복지·환경 분야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은 증가[1]하였으나,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과 자체경비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38%로 전년대비 0.1%p 증가, 지방보조금비율 및 자체경비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0.03%p, △0.17%p),

2022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재정효율성 분야)

분야/지표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지표성격[1]
재정 효율성	세입 관리	자체수입비율(지방세)	26.23	25.90	24.52	23.62	24.64	상향(↑)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4.62	4.28	4.09	3.58	3.78	상향(↑)
	징수 관리	지방세징수율[2]	97.69	97.80	97.82	98.17	98.22	상향(↑)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1.70	1.51	1.27	1.01	0.92	하향(↓)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1.11	0.99	0.88	0.79	0.74	하향(↓)
	외부 지원 관리	지방보조금비율	6.31	6.14	5.88	5.26	5.23	하향(↓)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52	2.48	2.40	2.28	2.38	하향(↓)
	내부 경비 관리	자체경비비율[3]	-	-	10.21	9.48	9.31	하향(↓)

주: 1. 자체수입비율·체납액관리비율은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 지방보조금비율과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1)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2)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3) 자체경비비율(%) =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세입결산액)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계획성 분야

- 재정계획성 분석 결과, 이·불용액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세수오차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1) 지방보조금규모(비율): '20년, 20.6조(5.26%), '21년, 21.7조(5.23%)

- 이·불용액비율은 전년 대비 0.77%p 감소한 4.95%로 개선되었으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전년 대비 4.74%p 감소한 95.42%, 세수오차비율은 전년 대비 4.08%p 감소한 85.65%로 악화되었음

2022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재정계획성 분야)

분야/지표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지표성격[1]
재정계획성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2]	-	-	101.96	100.16	95.42	100%지향
		세수오차비율[3]	-	-	92.51	89.73	85.65	100%지향
	재정집행	이·불용액비율[4]	-	-	7.79	5.72	4.95	하향(↓)

주: 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며, 이·불용액비율은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2)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당초예산상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정책사업비) × 100
3) 세수오차비율(%) = [(지방세 당초예산액+지방세 최종예산액) × 0.5 / 지방세 세입결산액] × 100
4) 이·불용액비율(%) = [(사고이월액+불용액) / 세입결산액] × 100
자료: 행정안전부

추진 시 고려사항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3개 분야의 13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채무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세수오차비율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음

-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에 따른 정책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지출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채무, 출자·출연·전출금, 중기재정계획반영 비율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특히, 재정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19년, 6.27%, '20년, 6.28%, '21년, 7.06%)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정부도 분기별 채무보증 사업 추진현황 점검,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한편, 재정분석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행 재정효율성 평가지표 중 자체수입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성과가 아닌 환경적 요건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지방보조금비율 및 출자·출연·전출금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가 크다고 재정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

행정예산분석과 황진솔 예산분석관(02-6788-4644)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발표

중소기업은 직·간접수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경향

- 2019년 기준 총수출은 5,422억 달러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2,132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수출을 달성하며 총수출의 39.3%를 차지[1)]
  - 중소기업 직접수출은 2019년 기준 1,009억 달러 규모로, 총수출의 18.6%를 차지
  - 중소기업 간접수출은 2019년 기준 1,123억 달러 수준으로, 총수출의 20.7%를 차지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규모 (2019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구분	총수출	중소기업 직접수출		중소기업 간접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및 비중('19)	5,422	1,009	18.6	1,123	20.7

주: 1. 총수출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2019년 기준 전체 총수출(전체 직접수출과 전체 간접수출의 합계)을 의미
2. 비중은 총수출 금액 대비 중소기업 직·간접수출 금액으로 산출
3.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
4.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외를 위미

자료: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2023.1.을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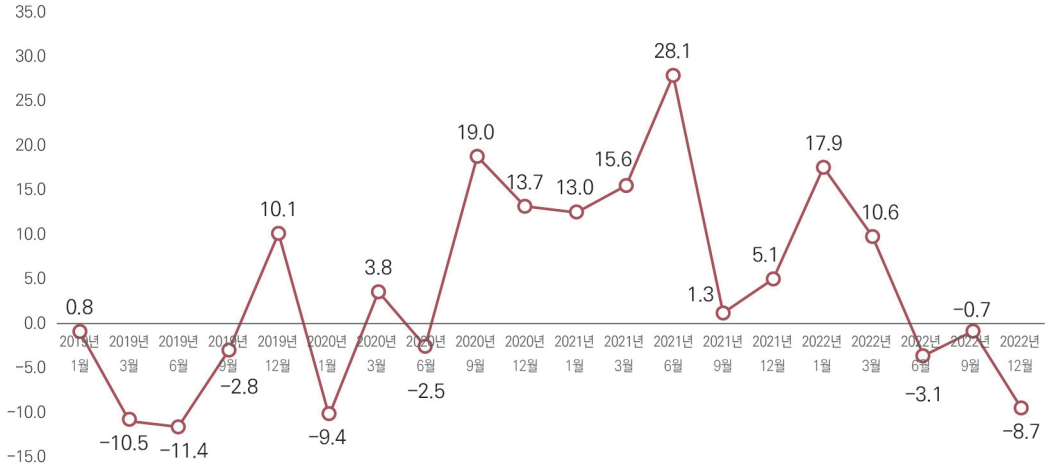
- 고용효과 측면에서, 수출 중소기업은 2021년 117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년 대비 2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2)]
  - 수출 중소기업 고용: 96만명('20) → 117만명('21)
  - 수출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21.9% ('20 대비 '21)

1)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현재 간접수출 통계는 공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2023.1.에 수록된 간접수출 통계 및 관련 내용을 본 고에 수록하였다. (간접수출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직접수출 기준으로 통계·내용 수록)
2)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2023.1.

- 2019~2022년간 전년 대비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율은 2021년 중반까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21년 중반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
  - 전년 대비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28.1('21.6.) → 5.1('21.12.) → △8.7('22.12.)[3]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율 (전년 대비, 2019~2022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중소기업 맞춤형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더불어, 최근 수출 중소기업 수가 감소하고 내수기업 중 신규 수출기업 수도 감소·정체 경향

  ※ 수출 중소기업 수 (만개): 9.4('18) → 9.5('19) → 9.5('20) → 9.2('21) → 9.2('22)

  ※ 신규 수출기업 수 (개): 26,520('19) → 25,688('20) → 23,165('21) → 23,401('22)[4]

-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5%)이 1개 국가에만 수출하고,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비중은 낮은 실정

  ※ 2022년 기준 1개국 수출 중소기업이 55.5%, 2~3개국은 23.7%, 4~5개국은 7.4% 등

  ※ 수출 중단기업의 85%가 단일국 수출 중소기업

3) 참고로, 전년 대비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2019년 1월 -0.8%에서 당해연도 12월 10.1%로 증가하였고, 2020년 12월 13.7%, 2021년 4월 24.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중소기업 맞춤형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관세청 수출통관자료 가공) 및 관계부처 합동,「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2023.1.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발표를 통해 세부전략을 제시(2023. 1.)

- 정책목표(정책비전: 중소기업이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단단한 수출강국 실현)
  -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5](%): 39('19) → 50('27)
  -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1,175('22) → 1,500('27)
  - 중소기업 수출국 다변화[6](%): 44('22) → 55('27)
  - 수출 1천만달러+ 기업(개사): 2,274('22) → 3,000('27)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의 3대 세부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3대 세부전략	10대 추진과제 주요 내용
1 디지털 분야 新수출시장 확대	•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촉진] 온라인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최대 1억원, 연 100개사), 글로벌 쇼핑몰 등 협업 프로그램 확대, 물류바우처 확대(847('22)→2,500개사('23)),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 트랙 신설(800개사,'23), 풀필먼트 서비스[1] 지원 확대(500('22)→750개사('23)) 등 •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수출 지원 쿼터제 도입(15('23)→20%('27)), 서비스수출 인증절차 간소화, G-TEP[2] 기반 기술교류국 확대 및 기술교류단 파견 등 • [스타트업 글로벌화 추진] 글로벌 유니콘[3] 프로젝트 추진(기존 사업화자금(최대3억원)·특별보증(최대 200억원) 및 해외자금유치(해외VC대상 글로벌IR, 현지네트워크 연계) 지원) 등
2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 육성	• [내수기업 세계로 1000+] 대기업의 간접수출 확인서 발급 인센티브 및 정부포상 신설, 간접수출을 직접수출과 동일 대우, 수출바우처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선심사·선정우대(최대5억원), 일반 내수기업 한도 2배까지 수출바우처 지원 등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제도 개편, 수출바우처 자동선정·금융기관 심사우대R&D 등 심사 우대 및 전용트랙 마련 등 단계별(유망→성장→강소→강소+)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강화 등 •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추진]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 신설(20%), 다변화도전 기업의 자부담 완화(10%p), 수출바우처 지원한도 확대 등 다변화 성공 우대, 관련 정보 제공 등
3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 체계 구축	• [글로벌 전진기지 확대] 중소기업 글로벌 공유오피스 글로벌비즈센터 개소, 현지진출 준비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지원단 신설(현지정보·계약·실무 지원) 등 • [한류 융합 현지진출 프로젝트] 수출박람회 개최 및 글로벌 수출전시회 참여 확대 • [무역장벽 부담 완화] 전담대응반 설치를 통한 상담·컨설팅 제공, 해외규격인증지원한도 확대, 환변동 보험 및 수출보험 지원 강화, 수출금융 확대(17.8조원 규모), 원자재 공동구매 보증 등 • [현장애로 해소] 유망 중소기업별 전담관 지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기능 개편,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연계, 수출바우처 횟수제한 폐지 및 정산범위 확대 등

주: 1)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사가 판매자 대신 고객 주문에 맞춰 상품의 입고·보관·재고관리-제품선별-포장-배송-교환·환불 등 물류 전과정을 일괄 대행해주는 물류서비스를 의미
2) G-TEP(Global Techology Exchange Platform)은 중소기업 온라인 글로벌 기술교류 플랫폼을 의미하며,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노비즈협회임
3) 글로벌 유니콘은 수출, 해외법인 매출 등 글로벌 매출 비중이 25%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의미
자료: 관계부처 합동,「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2023.1.을 바탕으로 재작성

5)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는 총수출 대비 (중소기업 직접수출액+중소기업 간접수출액) 비중으로 산출
6)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국 다변화 수치로 제시된 44%는 수출 중소기업 중 2개국 이상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비중을 의미(2022년 기준 1개국 수출 중소기업 비중 55.5%를 반올림한 수치인 56%를 차감하여 산출)

신규 수출 중소기업 유입 및 기존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방안 추진 시 고려사항

-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 중소기업 비중은 1%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7)]
  -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수출 중소기업 수 비중은 1.3~1.5% 수준
  -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비중이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8)], 수출 시장으로의 신규 중소기업 유입,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중요
  - 이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추진 시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수출을 추진하려 하거나 기존에 수출을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강화 필요
  - 수출 중소기업의 업력, 수출품목, 수출규모, 수출(희망)국가, 판로형태(온·오프라인) 등 수출 관련 요인에 따라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현황진단 및 수출전략 수립에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 지원 강화 필요
  - 아직 수출시장에 진출하지는 않았으나 수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기획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규제정보·플랫폼활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최신 현지정보 취득 채널 제공, 사업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 정부지원사업 활용안내 등을 통해 진출위험(risk)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수출 중소기업 확대에 기여할 필요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가·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분석, 마케팅방식, 국가별·플랫폼별 규제 동향, 수출입 관련 국내외 정책 변화, 판로확대, 성공사례 공유 등 다분야에서의 수출 중소기업 니즈 파악 및 지원 확대 필요
  - 더불어, 수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중소기업의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수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손동희 예산분석관(02-6788-4660)

7) 참고로, 각 연도별 전체 중소기업 수와 수출 중소기업 수는 2017년 각 6,045,964개와 92,287개(1.5%), 2018년 각 6,244,646개와 94,162개(1.5%), 2019년 각 6,521,262개와 95,229개(1.5%), 2020년 각 6,812,342개와 94,900개(1.4%), 2021년 각 7,047,073개와 92,114개(1.3%)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산업별·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8)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중소기업 수출 실적 및 '22년 지원계획」, 2022.1.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7.12.를 바탕으로 재작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

정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2023. 2. 1.)

-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의장: 대통령)를 출범하고, '23년 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

  * 5대 핵심분야: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점검·관리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인재양성의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분야를 논의·선정

- (추진배경)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신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인재양성 필요

  - 국내 기술인프라와 연구자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우수인재 확보 등 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첨단분야별 특성과 환경분석을 고려한 새로운 인재양성 전략 마련 필요

    ※ '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63개국 대상) 결과, 과학인프라(3위)·인구 1천명당 연구자 수(3위) 등은 상위권이었으나,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42위), 두뇌 유출 지수(33위), 해외고급 인재 유입 능력(49위) 등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남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제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구분	내용
비전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 양성
세부목표	- (선택·집중) 5대 핵심분야 특화인재 양성 - (산업중심) 산업-교육 미스매치 완화 - (역량총결집) 국가인재양성 총괄 추진체계 확립 - (지역주도) 인재 중심 지역 성장역량 강화
추진전략	① (중앙)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② (지방)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③ (학교)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개방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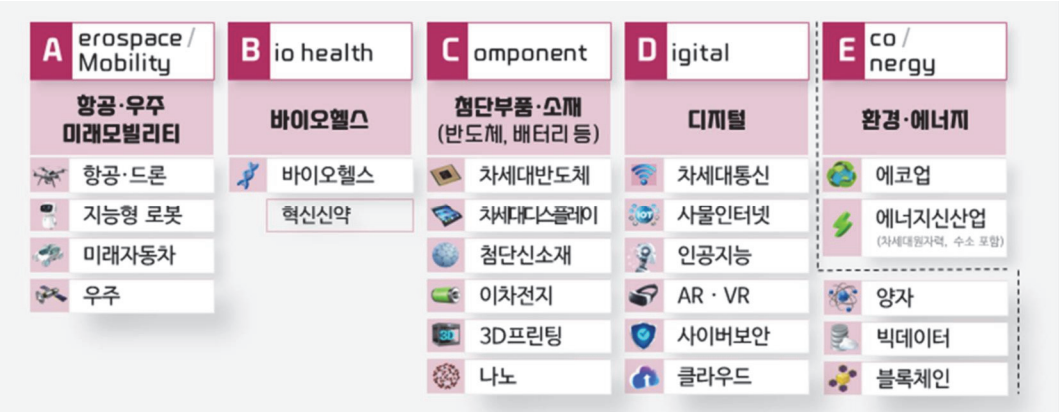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2.을 바탕으로 재작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주요 내용

● (전략 1)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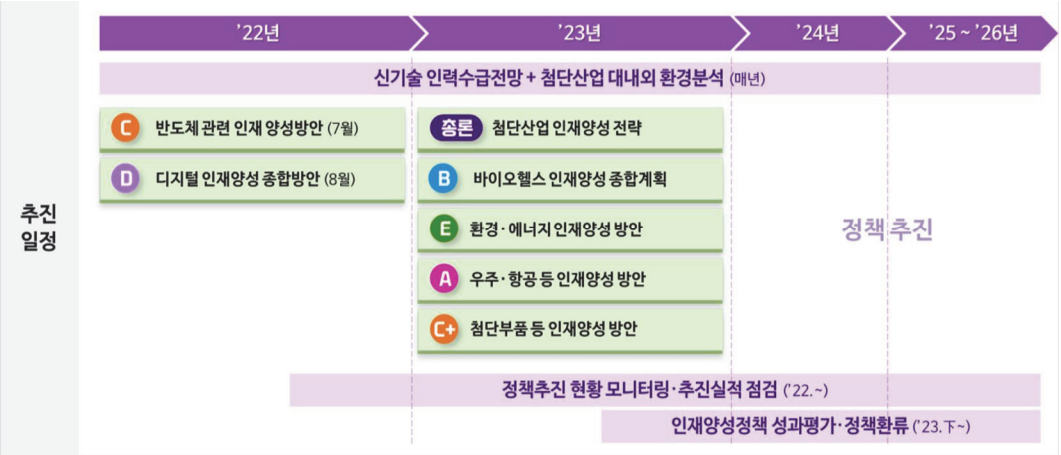
- (역량결집 중점분야 설정) 정책일관성, 시급성,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역량결집을 위한 5대 분야를 도출하고, 산업별 핵심부처를 중심으로 연내 단계적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수립

5대 핵심분야 22대 신기술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2.

첨단분야 인재양성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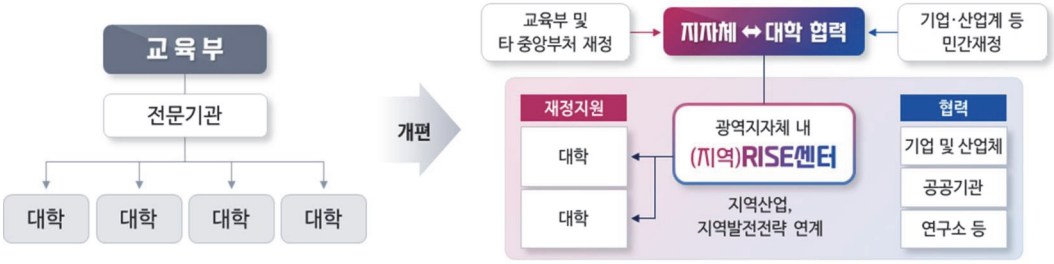
- (민·관 거버넌스 마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인재양성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산업 - 교육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분야별 인재양성 협업센터를 구축, 핵심분야별 인재양성 전략수립·정책자문·관련 DB구축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 지정

- (인재양성 기틀 공고화) 인재양성 3법(국가인재양성기본법·직업교육법·인재데이터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학생중심 지표 개발 및 중장기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 실시
- (데이터 기반 인재관리·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기술 역량별 인력수요 현황을 실시간 분석·공유하고, 디지털 학습·역량의 성과를 관리·인증하는 플랫폼 구축 및 표준화된 디지털 배지 도입

● (전략 2)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개편·범부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주도 대학재정 지원체계 구축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2.

-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컬대학 육성) 범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글로컬대학*에 전략적인 재정투자와 과감한 맞춤형 규제 특례 및 세제 지원 추진

  * 글로컬 대학 개념: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분야에 세계적인 대학

  ※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30개 내외('23년 10개 내외)로 선정하여, 5년간 교당 1,000억원 지원 추진 계획

● (전략 3)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개방성 제고

-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산업 수요를 신속하게 학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일학습 경험·활동이 수업 및 학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운영의 탄력성 제고
- (연구인력 유입·육성 활성화)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대학 내 연구소 총괄 관리·지원체계 구축·운영, 신진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융복합분야 연구활동 지원 강화 등

- (고숙련 실무 기술인재 양성)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및 선도적 직업교육 모델 정립, 지역별 첨단분야 공동실습소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환경 조성 등
- (평생·직업교육훈련 내실화)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 제공을 통해 첨단분야 핵심 직업전환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선도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여 첨단 실무지식과 교육 인프라 공유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추진시 고려사항

- (체계적 추진 필요) 인재양성은 교육 – 기술 – 산업 – 일자리가 모두 얽힌 종합 의제로 이전의 부처별 현안대응식 정책추진으로는 효율적·효과적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어, 범부처·종합적인 인재양성정책 추진을 위해 동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중앙–지방–학교의 역할분담·조정 및 긴밀한 연계·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추진 필요
- (효과적 성과관리 필요) 인재양성 정책의 중장기적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전주기적 종단데이터 관리, 인재양성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관리 등을 통해 효과적인 인재양성 정책 추진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최해인 예산분석관(02-6788-4648)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발표(2023. 1. 30.)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30일(월)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을 지정
  - 기획재정부는 기관의 규모(자산, 수입, 인력 등)와 정부 지원 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 등을 매년 실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공기업은 자산규모(2조원)와 자체수입(총수입의 85%)을 기준으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분류
  -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의미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분류기준</th><th>기관 예시</th></tr>
<tr><td rowspan="2">공기업
(32개)</td><td>시장형
(13개)</td><td rowspan="4">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td><td>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td></tr>
<tr><td>준시장형
(19개)</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 rowspan="2">준정부
기관
(55개)</td><td>기금관리형
(11개)</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td><td>「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td><td>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td></tr>
<tr><td>위탁집행형
(44개)</td><td>정부업무의 위탁집행</td><td>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
(260개)</td><td colspan="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d>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출연연구기관</td></tr>
<tr><td colspan="6">총 347개</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2023년 4월 기준)

- 2023년 4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47개로 2022년 350개 대비 3개 감소
  - (신규지정 +1) 한국특허기술진흥원(구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이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지정
  - (지정해제 △4) 4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운영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 상향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2.12.20.)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인 정원·수입액·자산규모를 상향

    ※ (정원) 50명→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30억원 이상
  - (유형변경)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 상향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수가 각각 전년 대비 4개(36개→32개) 및 39개(94개→55개) 감소하였고,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40개 증가(220개→26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

■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성과관리, 업무효율성 강화**

① (평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실시
② (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③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임원 임명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구 분	2022	2023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2	△4	0	0	△4
▪ 시장형	15	13	△2	0	0	△2
▪ 준시장형	21	19	△2	0	0	△2
② 준정부기관	94	55	△39	0	0	△39
▪ 기금관리형	13	11	△2	0	0	△2
▪ 위탁집행형	81	44	△37	0	0	△37
③ 기타공공기관	220	260	+40	+1	△4	+43
합계	350	347	△3	+1	△4	-

공공기관 변동 현황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	특허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4)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지정 해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유형 변경 (43)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유형 변경 (시장형 공기업→기타공공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유형 변경 (준시장형 공기업→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형 변경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37개	유형 변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에 따른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산·부채 및 당기순이익에서 변동 발생
  -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자산·부채 및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
  - 신규로 지정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경우 기존에도 공공기관 부설기관(한국특허정보원 부설)이었음에 따라 신규 지정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음
-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2021년 공공기관 총 자산은 2조 9,414억원, 총 부채는 6,020억원, 당기순이익은 124억원 감소
- 공공기관 유형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부채 및 당기순손익에서 변동 발생
  - (자산) 공공기관 유형변경에 따른 2021년도 자산 변동 효과는 공기업 13조 416억원 감소, 준정부기관 32조 328억원 감소, 기타공공기관 45조 744억원 증가
  - (부채) 공공기관 유형변경에 따른 2021년도 부채 변동 효과는 공기업 4조 7,425억원 감소, 준정부기관 4조 3,301억원 감소, 기타공공기관 9조 726억원 증가
  - (당기순손익) 공공기관 유형변경에 따른 2021년도 당기순손익 변동 효과는 공기업 597억원 감소, 준정부기관 2,994억원 감소, 기타공공기관 3,592억원 증가

2023년도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2023년 4월 기준)

- 2023년도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소속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이 43개로 가장 많고, 에너지 및 산업 분야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41개로 두 번째로 많은 상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지정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지정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경찰청	1	방위사업청	2
고용노동부	12	법무부	3
공정거래위원회	2	보건복지부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산림청	4
관세청	1	산업통상자원부	41
교육부	22	소방청	1
국가보훈처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5	여성가족부	5
국방부	3	외교부	3
국토교통부	28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금융위원회	7	인사혁신처	1
기상청	3	중소벤처기업부	11
기획재정부	4	통일부	2
농림축산식품부	12	특허청	6
농촌진흥청	1	해양수산부	17
문화재청	1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31	환경부	12
방송통신위원회	2	합계	347

공공기관평가과 김정훈 예산분석관(02-6788-4685)

해외재정동향

- 미 정부, 2024년도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일본 국회, 2023년도 예산 확정

미 정부, 2024년도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2024 회계연도('23년 10월 ~ '24년 9월) 미국 대통령 예산안(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을 의회에 제출(2023. 3. 9.)

- 바이든 대통령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총 6조 8,830억 달러 규모로, 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비 감면 등을 통한 수요 창출 및 경제 발전(Growing the Economy From the Bottom Up and Middle Out), ② 미국의 신기술 개발 선도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통한 미국의 발전 촉진(Delivering Progress Across America), ③ 안전한 미국 사회 유지 및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 회복(Keeping America Safe and Restoring America's Global leadership)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예산안은 2024년 예상 재정수지 적자를 △1조 8,460억 달러(GDP 대비 6.8%) 수준으로 전망하며, 법인세율 인상(현행 21% → 28%) 및 고소득자 대상 사회보장세 세율 인상(현행 3.8% →5%) 등 증세 정책 등으로 10년간 5조 4,460억 달러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 감축 전망
    - 국가채무의 경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25조 9,100억달러(GDP 대비 98.4%) 수준에서 2033년 말 기준 43조 6,190억달러(GDP 대비 109.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국 예산과정에서의 대통령 예산안의 역할]

-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각 부처 및 연방기관에서 제출된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2월 첫 번째 월요일에 대통령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미국 의회는 대통령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고 예산위원회에서 작성된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심의·의결하나, 대통령 예산안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예산목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예산결의안의 기초자료가 됨

2024년 실질성장률은 1.5%로 상승(2023년 0.6%), 경상성장률은 3.7%로 하락(2023년 4.5%)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4년 2.4%로 2023년 4.3%보다 하락하고, 10년 만기 국채(T-notes) 이자율도 2024년 3.6%로 2023년 3.9%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24년 4.6%로 2023년 4.3%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FY2024 대통령 예산안의 거시경제전제

(단위: 십억달러, %)

구분(Calendar Year)	실적	전망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33
경상GDP	23,315	25,409	26,544	27,523	28,750	29,981	31,224	40,157
경상성장률	10.7	9.0	4.5	3.7	4.5	4.3	4.1	4.3
실질성장률	5.9	1.8	0.6	1.5	2.3	2.1	2.0	2.2
CPI	4.7	8.1	4.3	2.4	2.3	2.3	2.3	2.3
이자율(10Y T-notes)	1.4	3	3.9	3.6	3.5	3.4	3.4	3.5
실업률	5.4	3.7	4.3	4.6	4.4	4.3	4.2	3.8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9, 2023.

2024년 총수입은 전년보다 2,340억 달러(4.9%) 증가한 5조 360억 달러(GDP의 18.5%) 규모

- 2024년 주요 세목 중 개인소득세는 2조 3,900억 달러(전년 대비 2.7% 증가), 법인세는 6,660억 달러(전년 대비 22.0% 증가), 사회보장세는 1조 2,080억 달러(전년 대비 0.8% 증가), 소비세는 1,140억 달러(전년 대비 25.3% 증가) 규모

FY2024 대통령 예산안의 총수입 및 주요 세목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33
총수입	4,897	4,802	5,036	5,419	5,773	6,080	7,991
개인소득세	2,632	2,328	2,390	2,617	2,849	3,029	4,154
법인세	425	546	666	733	734	740	803
사회보장세	1,066	1,198	1,208	1,263	1,325	1,379	1,805
노인의료보장세 (medicare payroll taxes)	339	409	464	485	509	533	715
소비세	88	91	114	114	119	121	141
관세	100	102	61	50	52	54	57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4, 2023.

2024년 총지출은 전년보다 5,110억 달러(8.0%) 증가한 6조 8,830억 달러(GDP의 25.3%) 규모

- 2024년 총지출은 4조 1,940억 달러 규모의 의무지출(GDP의 15.4%)과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재량지출(GDP의 7.0%) 및 순이자지출 7,890억 달러(GDP의 2.9%)로 구성
  - 2024년 재량지출 중 국방예산은 8,8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되었으며, 비국방 재량지출은 1조 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됨
    - 국방예산 중 국방부의 경우 전체 부처 예산 중 최대 금액인 8,420억달러 편성
    - 비국방 예산의 주요 사례로 반도체 등 기초과학 투자, 기후 관련 연구 투자 등을 통한 미국의 신기술 개발 선도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113억 달러를 편성(2023년 예산 대비 18.6% 증가로 연방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액 증가율 중 가장 높음)
  - 2024년 의무지출 중 사회보장지출은 1조 4,5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 노인의료보장지출(Medicare)은 8,4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 저소득자의료보장지출(Medicaid)은 5,5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 기타 의무지출은 1조 3,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됨

FY2024 대통령 예산안의 총지출 및 세부항목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33
총지출	6,273	6,372	6,883	7,091	7,294	7,589	10,026
재량지출	1,664	1,736	1,900	1,916	1,936	1,955	2,079
국방지출	752	800	885	906	907	921	984
비국방 재량지출	912	936	1,015	1,010	1,029	1,034	1,095
의무지출	4,133	3,975	4,194	4,343	4,490	4,724	6,626
사회보장지출	1,212	1,346	1,459	1,553	1,646	1,742	2,371
노인의료보장지출	747	821	842	958	1,028	1,104	1,770
저소득층의료보장지출	592	608	558	582	620	656	967
기타의무지출	1,581	1,200	1,335	1,251	1,196	1,222	1,518
순이자지출	476	661	789	833	867	910	1,321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4, 2023.

2024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 8,460억 달러(GDP 대비 6.8%) 규모로 전년에 비해 2,770억 달러(17.7%) 증가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27조 7,83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조 8,730억 달러(7.2%) 증가될 전망

- 2024회계연도 예산안의 증세 정책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Deficit) 폭을 감축하여 10년간 2조 8,570억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폭 감소 목표 제시
- 국가채무(Debt held by the public)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98.4%에서 2024년 102.0%로 3.6%p 증가할 것으로 전망

FY2024 대통령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33	2024-2033
재정수지적자 1)	기준선 전망 (A)	1,376	1,726	1,863	1,897	1,798	1,735	2,535	19,912
	(GDP 대비 %)	(5.5)	(6.6)	(6.8)	(6.7)	(6.1)	(5.6)	(6.4)	-
	예산안의 재정수지 적자 감축 규모 (B)	-	△156	△17	△226	△277	△227	△1,033	△2,857
	예산안 반영 결과(A+B)	1,376	1,569	1,846	1,671	1,521	1,509	2,035	17,054
	(GDP 대비 %)	(5.5)	(6.0)	(6.8)	(5.9)	(5.1)	(4.9)	(5.1)	-
국가채무		24,252	25,910	27,783	29,592	31,233	32,851	43,619	-
(GDP 대비 %)		(97.0)	(98.4)	(102.0)	(104.1)	(105.2)	(106.3)	(109.8)	-

주 : 1) FY2024 대통령 예산안에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①"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에 있는 재정수지 적자규모와 ②대통령 예산안의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규모의 변동분을 합산하여 정하고 있음. 기준선은 현행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향후에 수입, 지출, 그리고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임.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2, S-10, 2023.

예산분석총괄과 강지혜 예산분석관(02-6788-4626)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는 2023년 4월 11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IMF는 세계경제가 2023년에는 2.8%('23.1. 대비 0.1%p 하향), 2024년에는 3.0%('23.1. 대비 0.1%p 하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부터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던 러-우 전쟁, 경제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 · 크레딧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IMF는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억제된다는 가정 하에 동 전망 발표
  - 이와 같은 2023년 성장률 전망은 2022년 초 이후 발생한 불리한 충격 전의 전망('22.1. 세계경제전망 수정) 대비 1.0%p 낮음
- 다만, IMF는 금융부문의 불안이 추가된 대안 시나리오에서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5%,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8%로 기준 시나리오 대비 부정적으로 전망
  - IMF는 대안 시나리오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 긴축과 재정 상태 악화, 증가하는 지구 경제적 분열의 여파로 인한 금융부문의 불안이 추가되는 상황에 대한 전망 제시
  - 동 시나리오의 2023년 성장률 전망은 2020년 코로나19 초기 위기 상황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한 2001년 글로벌 침체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수준
-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3년 1.5%('23.1. 대비 0.2%p 하향), 2024년 2.4%('23.1. 대비 0.2%p 하향)로 전망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됨. 이는 수출부진과 높은 가계부채를 원인으로 하향 전망 되었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임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의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폭

(단위: %p)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선진국	세계
+0.4	+0.8	+0.4	+0.2	-	△0.9	-	△0.3	+0.1	+0.2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기관의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IMF ('23.4.)	정부 ('22.12.)	NABO ('22.10.)	IB 평균 ('23.2.)	한은 ('23.2.)	OECD ('23.3.)	KDI ('23.2.)	S&P ('22.12.)	Fitch ('23.3.)
1.5	1.6	2.1	1.1	1.6	1.6	1.8	1.4	1.2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가 그룹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선진국은 1.3%('23.1. 대비 0.1%p 상향)로, 신흥국은 3.9%('22.10. 대비 0.1%p 하향)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 선진국 그룹 전망: (美) 1.6(+0.2), (유로존) 0.8(+0.1), (獨) △0.1(△0.2), (日) 1.3(△0.5), (英) △0.3(+0.3)

※ 신흥국, 개도국 그룹 전망: (中) 5.2(-), (印) 5.9(△0.2), (러) 0.7(+0.4), (멕시코) 1.8(+0.1), (사우디) 3.1(+0.5)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경제성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3.1. 전망(A)	'23.4. 전망(B)	조정폭 (B-A)	'23.1. 전망(C)	'23.4. 전망(D)	조정폭 (D-C)
세계	3.4	2.9	2.8	△0.1	3.1	3.1	△0.1
선진국	2.7	1.2	1.3	+0.1	1.4	1.4	-
-미국	2.0	1.4	1.6	+0.2	1.0	1.0	+0.1
-유로존	3.5	0.7	0.8	+0.1	1.6	1.6	△0.2
독일	1.9	0.1	△0.1	△0.2	1.4	1.4	△0.3
이탈리아	3.9	0.6	0.7	+0.1	0.9	0.8	△0.1
스페인	5.2	1.1	1.5	+0.4	2.4	2.0	△0.4
-일본	1.4	1.8	1.3	△0.5	0.9	1.0	+0.1
-영국	4.1	△0.6	△0.3	+0.3	0.9	1.0	+0.1
-캐나다	3.5	1.5	1.5	-	1.5	1.5	-
-한국	2.6	1.7	1.5	△0.2	2.6	2.4	△0.2
신흥개도국	3.9	4.0	3.9	△0.1	4.2	4.2	-
-중국	3.0	5.2	5.2	-	4.5	4.5	-
-인도	6.8	6.1	5.9	△0.2	6.8	6.3	△0.5
-러시아	△2.2	0.3	0.7	+0.4	2.1	1.3	△0.8
-멕시코	3.1	1.7	1.8	+0.1	1.6	1.6	-
-사우디	8.7	2.6	3.1	+0.5	3.4	3.1	△0.3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nflation Peaking amid Low Growth), 2023.4.

- (인플레이션 전망) 세계 인플레이션은 2022년 8.7%에서 2023년 7.0%('23.1. 대비 0.4%p 상향), 2024년 4.9%('23.1. 대비 0.6%p 상향)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연료 및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2023년 1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으나 연료 및 상품가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인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2025년 경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불안이 추가된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2023년 세계 인플레이션은 세계적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6.8%로 전망
- (전망의 변동요인) 전망의 위험요인은 하방을 향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및 최근의 금융 부문 혼란에 적응함에 따라 단기 및 중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주요 하방요인으로 ① 글로벌 금융시장 내 긴축상황, ② 높은 부채수준에 따른 통화정책, ③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감소 지연, ④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높은 부채 수준, ⑤ 중국의 회복 지연, ⑥ 우크라이나 등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을 제시

IMF의 정책권고

-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정시키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긴장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불확실성과 시장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 모니터링, 과거 해결사례 적용 등 고려
- 금융 안정성 보호를 위하여 위험 요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금융시장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 유동성 지원, 금융부문의 규제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활용 필요
- 그 밖에 환율변동에 대한 대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적정한 재정 조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식량안보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
- 중기적 관점에서 부채규모와 재정적자의 관리,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였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다자간 협력 강화와 저탄소 경제체제 전환을 강조함

행정예산분석과 김소연 예산분석관(02-6788-4643), 한서영 예산분석관(02-6788-4639)

일본 국회, 2023년도 예산 확정

일본 국회는 안전보장·외교 강화, 디지털전원도시국가 구상, 어린이 정책 강화 등을 키워드로 하는 2023년도 예산을 확정(2023. 3.28.)[1)]

- 안전보장·외교 강화
  -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2022)」 등을 수립하고 5년간 43조엔을 투자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G7 히로시마 서미트(5월) 및 일본-ASEAN 우호협력 50주년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신시대 리얼리즘(realism) 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예산 확보(외무성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엔 증가한 7,560억엔)

    ※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국방·외교 등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 방침

- 디지털전원도시국가 구상(構想)
  -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종합전략(2021)」에 따라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교부금(1,000억엔)을 통해 지자체 디지털화 가속,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관광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방창생(蒼生)을 지원

    ※ 디지털전원(田園)도시국가 구상 종합전략: 2021년 기시다 내각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디지털 기반정비, 디지털 인재 육성확보, 디지털기술활용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어린이 정책 강화
  -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을 창설하고 어린이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육아 일시지원금을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 어린이·가정청(家庭廳): 저출산 및 어린이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조직

1)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며, 의회 심사를 거쳐 3월말에 예산이 확정된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예산안은 큰 수정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세입 예산 중 기업실적 회복 예상으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입 중 방위력 강화 대응 재원을 신설

- 2023년도 세입예산은 114조 3,812억엔으로 전년 대비 6조 7,848억엔(6.3%) 증가
- 세입예산은 크게 조세 및 인지수입, 기타 수입, 공채금으로 구성
  - 기업실적 회복 예상으로 법인세, 소비세 등 조세 및 인지수입이 증가(+4조 2,050억엔)
  - 기타 수입에는 방위력 강화 대응 재원(4조 5,919억엔)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전입금,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립금·기금 등 불용분 국고반납액,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충당
  - 공채금(신규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축소(-1조 3,030억엔)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공채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공채의존도는 2022년 34.3%에서 2023년 31.1%로 감소

일본의 2023년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억엔, %)

구분	2022(A)	2023(B)	증감	
			(B-A)	(B-A)/A
세입예산 합계(C)	**1,075,964**	**1,143,812**	**67,848**	**6.3**
- 조세 및 인지수입	652,350	694,400	42,050	6.4
- 기타 수입	54,354	93,182	38,828	71.4
방위력 강화 대응 재원	-	45,919	45,919	순증
- 공채금(D)	369,260	356,230	△13,030	△3.5
공채의존도(D/C)	34.3	31.1	△3.20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일반회계 통상분에 임시특별조치분을 합한 것임
2. 기타 수입은 관업익금 및 관업수입 (官業益金及官業收入, 국가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수익 및 수입), 정부자산정리수입(政府資産定理收入), 잡수입, 전년도잉여금수입 등임
3. 공채금(公債金)은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수입임

자료: 일본 재무성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관계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2023년에는 방위관계비 등이 증가

- 2023년도 세출예산은 114조 3,812억엔으로 전년 대비 6조 7,848억엔(6.3%) 증가
  - 2019년 이후 예산규모가 100조엔을 초과
- 세출예산은 크게 사회보장관계비,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 방위관계비 등으로 구성
  - 내역별로 보면 사회보장관계비가 36조 8,889억엔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국채비 25조 2,503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16조 3,992억엔 등의 순임
  - 방위관계비는 2022년 5조 3,687억엔에서 2023년 10조 1,686억엔으로 89.4% 증가하였는데, 2023~2027년 중 총 43조엔을 사용할 계획이며, 앞서 살펴본 방위력 강화 대응 재원을 활용

일본의 2023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엔, %)

구분	2022(A)	2023(B)	증감	
			B-A	(B-A)/A
세출예산 합계	**1,075,964**	**1,143,812**	**67,848**	**6.3**
- 사회보장관계비	362,735	368,889	6,154	1.7
- 국채(國債)비	243,393	252,503	9,111	3.7
- 지방교부세교부금등	158,825	163,992	5,166	3.3
- 방위관계비	53,687	101,686	47,999	89.4
- 공공사업관계비	60,574	60,600	26	0.0
- 문교(文敎) 및 과학진흥비	53,901	54,158	257	0.5
-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2,699	12,654	△46	△0.4
- 에너지대책비	8,756	8,540	△217	△2.5
- 경제협력비	5,105	5,114	8	0.2
- 중소기업대책비	1,713	1,704	△9	△0.5
- 보훈(恩給)관계비	1,221	970	△252	△20.6
- 기타경비	58,354	58,004	△350	△0.6
- 예비비	5,000	5,000	-	-
- 코로나-19 및 원유물가 대책 예비비	50,000	40,000	△10,000	△20.0
- 우크라이나 정세 대응 예비비	-	10,000	10,000	순증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일반회계 통상분에 임시특별조치분을 합한 것임
2. 사회보장관계비는 의료, 연금, 복지, 고용 등에 활용되는 비용임
3. 국채(國債)비는 국채 원금 및 이자 비용 상환을 위한 비용임

자료: 일본 재무성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변재연 예산분석관(02-6788-3741)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3년 Vol. 1 통권 제22호

발 행 일	2023년 4월 21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3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 간 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 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